

## 2021년 6월 반부패·청렴 퀴즈 정답 및 해설

### Q 1 (○)

- 산하기관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야시간에 업무지시를 하면서 익일 아침에 보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갑질에 해당한다.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기간·심야 등 사회통념상 근무가 적절하지 않은 시간대에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갑질(업무 불이익 유형)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Q 2 (○)

- 공무원이 거래처에 전화하여 이웃돕기 행사에 기부할 50kg 쌀 등 기부금품을 요구한 행위는 갑질에 해당한다.

(해설) 공익목적과 무관하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에 해당하니 주의 바랍니다.

### Q 3 (○)

- 가상통화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가상통화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의8 제3항)

- \* 1.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 2.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
- 3.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
- 4. 가상통화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

### Q 4 (×)

- 공무원이 경조사의 통지를 하면서 직위를 명시하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해설) 공무원이 경조사를 알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자신의 직위를 명시하는 것은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행위가 아니므로 공무원 행동강령(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 Q 5 (×)

- “법이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어 할 수 없습니다” 등과 같은 정도의 의사표시는 명확하지 않아 부정청탁을 거절했다고 볼 수 없다.

(해설) 공직자가 처음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법이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어 할 수 없습니다” 등과 같은 정도의 의사표시도 거절의사로 봅니다. (청탁금지법 매뉴얼, 2019, 국민권익위원회)

### Q 6 (○)

- 공직자가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동일 내용의 부정청탁을 처음 한 사람(A)과 그 후에 한 사람(B)이 다르더라도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해설) 신고의무가 발행하는 동일한 부정청탁인지 여부는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공직자등을 기준으로 내용의 본질적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므로, 동일한 내용의 부정청탁을 처음 한 사람(A)과 재차 한 사람(B)이 다르더라도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 Q 7 (○)

- 발송인 정보 미기재 등의 사유로 선물 제공자를 몰라서 거절의 의사표시나 반환을 할 수 없다하더라도 반드시 선물을 지체없이 신고하고 소속기관장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해설) 발송인 정보 미기재 등의 사유로 선물 제공자를 몰라서 상대방에게 직접 거절의 의사표시나 반환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추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물 사진을 촬영하거나 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언(택배기사, 경비원 등)을 확보하여 신고기관에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Q 8 (×)

- 공직자가 수수 금지 선물을 받은 사실을 청탁방지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신고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먼저 신고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Q 9 (×)

- 공직자가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석하는 행위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

(해설)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Q 10 (×) (외부강의등 신고)

- 공직자가 검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

(해설)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의 사전 검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 허가를 받고 검직하는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